<중국 문화 바로 알기: 문화 코드로 본 중국> 제1강

중국은 무슨 꿈을 꾸는가; 시진핑(習近平)의 中國夢과 21세기 중국[1)]

백원담(성공회대교수)

1.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모델론

2008년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화려한 개막과 함께 개혁개방 30주년의 성공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의 성공을 시장만능주의의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 국가개입의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2)]의 승리로 평가했다. 여기서 베이징 컨센서스란 조슈아 쿠퍼 레이모(Joshua Cooper Ramo)가 2004년 영국의 외교정책센터에서 중국의 힘을 설명하는 새로운 역학에 관해 논하기 위해 가져온 개념으로 레이모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발전모델을 설명하고 이로써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체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지오반니 아리기(Giovanni Arrighi)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30년 성공에 환호하며 비자본주의적으로 세계를 재편해갈 수 있는 경제적 기초의 구축상으로 세계경제학계에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를 부조해내었다.(Giovanni Arrighi/강진아, 2004) 아리기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테제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의 실패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이 결합된 결과, 세계 문명들 사이의 더 큰 평등성에 기초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식 세계-시장 사회가 《국부론》출판 이후 250여 년간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리기는 시장을 지배도구로 본 스미스의 이론은 비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이해하는 데 특히 적합하며, 그런 점에서 중국은 그 명확한 실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세계화한 유럽식 국가 체계에 종속적으로 편입되기 전의 중국 경제나 전혀 다른 국내적·세계사적 상황에서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비자본주의의 중국경제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아리기의 평가와 제언에 대한 중국 안팎에서의 반향은 크고, 중국정부 또한 개혁개방의 성공과 중국모델론에 대한 높은 평가에 고무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다른 굴기 혹은 부상과 세계전략기획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를 열어낼 때 히로시마·나카사키의 버섯구름이 야기한 공포분위기와 그 한편의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할 만한 자기전망의

---

1) 이 강의록은 인용이 불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슈아 쿠퍼 레이모의 이 개념에 대해 아리프 덜릭은 레이모가 중국의 발전을 모두 흔들림없이 ‘혁신’을 추진해온데 따른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점, 그리고 그 혁신으로 파생된 문제들을 다시 혁신에 대한 약속으로 해결하려 하며 구조적인 문제에 분석을 거의 하지않는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중국의) 혁신에 대해 레이모는 ‘정치와 사회의 목표로부터 자유로우며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미신으로 만들어버린다. 각종 정치경제적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있는 중국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혁신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색이 목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어떤 ‘정치 형태’에 대한 모색은, 혁명적 사회주의의 유산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으면서도 그 혁명적 과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로를 찾고자 하는 중국사회의 모든 이데올로기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긴장상태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다. 지난 20세기 동안 중국사회가 끊임없는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말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Arif Dirlik, Beijing Consensus: Beijing "Gongshi." Who Recognizes Whom and to What End?, 2006. http://www.en.chinaelections.org/uploadfile/200909/20090918025246335.pdf

아리프 덜릭, <베이징 컨센서스, 누구와 누구의 컨센서스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황핑·조슈아 쿠퍼 레이모·아리프 덜릭 등 지음/김진공·류준필 옮김, 《베이징 컨센서스》, 소명출판, 2015, 223쪽 참조.

세계상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는 아시아 보편으로 군림하던 전통시기 중국경제와 개혁개방시기의 중국경제를 역사의 연속선에 놓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예속되거나 편승한 중국경제의 성공을 비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성격지을 수 있는가 또한 문제적이다.

한편, '중국모델론(中國模式論)'이 대두하는 즈음(2008)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반둥'의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Arrighi, 2009, 528쪽) 앞의 책에서 아리기는 중국(과 인도)이 기왕의 패권적인 세계지배, 독점과 경쟁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전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세력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수단으로 세계시장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스미스가 오래 전에 구상한 문명연방(commonwealth of civilization)을 실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으며, (비동맹운동의) 옛 반둥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새로운 반둥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리기는 1955년 네루와 저우언라이가 함께 반둥평화선언을 주도하였듯이 중국(과 인도)는 옛 반둥의 주역에서 새 반둥의 주역으로 나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가능성 실현을 위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의 양육강식체제가 아니라 스기하라 가오루(彬原薰)의 테제[3], 근면혁명, 노동집약적인 경제발전유형에 기초한 호혜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로 방향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자본의 전지구화에 대한 문명적 대안을 만들어낼 것을 역설하였다.

아리프 덜릭 또한 베이징 컨센서스를 둘러싼 환상적 수준의 문제를 논하면서 중국이 '반둥'이 되었다고 하였다.(Arif Dirlik, 2006)

> 베이징은 현재 제3세계 또는 남반구의 새로운 무게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 사실은 베이징 자신도 흔쾌히 받아들인다. 베이징은 이제 자본주의 세계화 시대의 '반둥'으로 다시금 등장했다. 단순히 식민주의 극복을 추구하거나 '발전의 제3의 길'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식민주의적 현대화로 양상되었지만 대안은 보이지 않았던 주변부 국가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리기와 덜릭은 새로운 사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반둥으로서 문명사적 전환의 가능성을 가늠한 것일까. 덜릭은 아리기가 앙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ar Frank)나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등 세계체제론자들이 '현재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재배치는 그런 이동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새로운 공간적·사회적 분할을 놓고 볼 때 동아시아가 국가적 차원이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균등하게 배치된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도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발전경험을 동일화하는 아시아는 하나라는 본질주의는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과 자본의 전지구화시대에 공간지리적 경계짓기의 문제 또한 제기했다. 아울러 중국, 인도, 브라질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지배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제3세계 연합을 형성

---

3) 스기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서구경로를 열어 젖힌 산업혁명은 세계인구의 소수 일부분의 생산력만 크게 확대한 '생산의 기적'이었다. 이와 달리 동아시아 경로를 열어낸 근면혁명은 노동 집약적 에너지절약형 산업화를 통해 세계 인구의 광대한 다수에게 생산의 기적의 혜택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분배의 기적'이었다. 사실 산업화의 확산에 따른 환경 파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서구 경로가 동아시아경로로 접근해 가야만 분배의 기적은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오반니 아리기/강진아, 《베이징의 아담스미스》, 앞의 책, 64쪽.

중이라고 보는 시각을 게재하면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자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경쟁을 상기시킨 것이다.(Arif Dirlik, 2006)

2. 21세기 중국몽

2012년 시진핑은 중국몽이라는 개념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시진핑의 지도사상으로 개념화되었다. 시진핑은 2012年11月29日, 국가박물관에서 '부흥의 길 復興之路' 관람 당시 중국몽 개념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 China Dream을 게시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 개념을 통해 두 가지 백년(兩個百年) 단위 실현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중국공산당 100주년에는 전면 소강사회의 건설, 그리고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富强民主文明和諧)의 사회주의 현대화국가건설이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순리에 맞게 실현해나가자는 것이다.

2013년 시진핑은 집권하였고, 그의 중국몽 담론은 국가지도사상으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을 실제적인 실현목표로 하며, 그 경로로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로를 따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견지하며, 민족정신을 홍양하고, 중국역량을 응집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실시수단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등 5위 일체 건설을 제출했다. 무엇보다 중국몽의 특징은 개인, 국가, 민족의 이익을 일체화 하고 각 개인의 역량과 각기의 꿈을 응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국가민족 부흥의 길(國家民族 復興之路), 중국이상의 길(夢想之路)로서 정의되고 있다.

"中国梦 "의 주요동력에는 세가지 근거(三大来源)가 제시된다.

첫째, 경제성장, 생활개선, 물질진보, 환경제고 추구 追求經濟騰飛，生活改善，物質進步，環境提升

둘째, 공평정의, 민주법제, 공민성장, 문화번영, 교육진보, 과학기술 창신 추구 追求公平正義，民主法制，公民成長，文化繁榮，教育進步，科技創新

셋째, 부국강병, 민족존엄, 주권완비, 국가통일, 세계평화 추구 追求富國強兵，民族尊嚴，主權完整，國家統一，世界和平.

그러면 이러한 중국몽은 어떻게 꿈꿀 수 있었던 것일까. 흔히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서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야말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로를 밟아왔다는 내부의 평가로부터 문제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대 중국사상의 흥기》의 저자 왕후이(汪暉)는 중국이 1989년 천안문사건이라는 곤경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사회주의로의 순조로운 전환과 중국모델론이 제기될 만큼 개혁개방 30년의 성공이 가능했던 과정을 해명한다.[4] 왕후이는 중국의 20세기 역사 전진의 동력에서 그 근원을 찾으며, 자주와 개방의 변증법으로 중국 굴기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시기 중국은 국민경제와 공업에서 고도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체제를 형성,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전제를 이루며, 그런 점에서 중국의 개혁은 내재적인 논리를 갖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속적 경제발전이나 동아시아모델과는 다른 경로로, 왕후이는 이러한 중국의 독립적이며 온전한 주권의 위상은 중국공산당이라는 정당의 실천을 통해 가능했다고 본다. 소련공산당과의 수정주의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당의 관계와 정치적 과정에서 발전해 나온 특수한 정치적 독립성이 국가와 경제 등의 영역으로 구현되었다는 주장인데, 특히 왕후이는 중국공산당이 혁명과정과 사회주의시기 수행한 노선논쟁과 이론논쟁

4) 汪暉/최정섭, <중국 굴기의 경험과 도전>,『황해문화』2011년 여름호

이야말로 오류 수정 메카니즘으로서 중대한 역사적 역할을 감당해왔음을 역설한다.

중국 혁명, 사회주의건설, 그리고 개혁개방의 성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도시 노동자가 아닌 대다수 농민을 주체로 한 바와 같이 기존 모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출발해서 매 하나의 과정마다 치열한 노선논쟁을 통해 이후 방향타를 잡아나간 주체적 행로였다는 것이다. 왕후이는 그런 점에서 '기존모델이 없다는 것은 중국혁명 전체의 특징'이며 야오양의 '중성화국가'[5]개념을 가져와 마르크스와 이후 유럽사회주의의 국가이론조차 수정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경로였다는 점으로 중국사회주의를 특화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 실천은 대다수이자 절대다수인 인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를 창건하는 데 진력하였고, 국가 혹은 정부와 특수이익 간의 유대의 단절은 이것을 전제로 한다. 이론상으로 이러한 사회주의의 국가 실천 역시 초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이론에 대한 수정으로부터 배태된 것이며, 마오쩌둥의 「십대관계(十大關係)를 논함」, 인민내부의 모순을 정확히 처리하는 데에 관한 강화(講話) 등의 문헌은 바로 이 새로운 국가이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대다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조건일지라도 여타 국가형식에 비해 이익집단의 관계로부터 한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중성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개혁성공의 관건이며, 또한 개혁에 대한 합법성의 소재로 이러한 전제 없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개혁이 여러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중성화라는 술어 역시 '중성화'라는 함의를 은폐하였는데, 곧 국가가 대표하는 이익의 보편성은 중국혁명과 사회주의 실천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개혁의 초기 단계에서 개혁의 정당성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가 대표하는 이익의 보편성에서 기원한다고 하겠다.

중국혁명세력은 마르크시즘의 중국화를 통해 10월 혁명의 포화 속에서 탄생한 소련도 해결하지 못한 제국주의의 패권적 세계지배를 저지시키고 20세기 중기에 세계역사상 전대미문의 국면, 하나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독립적 주권국가로서 국가로서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지만, 일방통행으로 개혁개방이라는 전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숱한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겪고 '굴기의 경험'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

왕후이의 논의에 대해서는 중국몽을 아시아 사회주의 사상의 전개라는 입지에서 전격적으로 쟁론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 물적 토대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과정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리프 덜릭의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아리프 덜릭은 자본의 초민족주의화가 주는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특정한 유럽적 기원에서 떨어져나와 확실한 전지구적 추상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전지구화의 산물인 비유럽의 자본주의사회들이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근대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본주의의 서사는 더 이상 유럽역사의 서사가 아니다. 따라서 전지구화에 동반된 외견상의 문화적 동질화는 문화적 분열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특징지어온 전지구화와 분열의 동시적 발생은 인구의 이동에서 새로운 초민족적인 제도의 등장, 유럽중심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탄생했던 바로 그 언어들을 통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도전, 일상적 문화습성의 동질화과정에서 나타난 인종적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른 많은 현상에서 가시화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산물들과 자본주의와 민족국가에 의해 오랫동안 억압된 문화 습성들이 돌연히 동일한 단계에서 치명적인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협력하기도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이르면 나는 어떤 현상

---

5) 린이푸(林毅夫)교수와 함께《중국의 기적》공저자인 야오양(姚洋)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경제발전의 조건을 총결할 때, 중성정부(中性政府) 혹은 중성국가(中性國家)를 중국개혁이 성공한 전제로 삼는다. 다음 자료 참조.

林毅夫、姚洋（主编）:《中国的奇迹：回顾与展望》, 北京大学出版社 , 2005年

姚洋, <中性政府与社会平等是中国经济增长的原因>,《中国经济》, 2009年10月16日

姚洋, <中性政府与国家政治精英的选拔>,《文化纵横》2015年6月号

에 인과론적 우선성을 부여하기가 망설여진다.(Arif Dirlik/황동연, 2000; 309-310)

그런데 중국은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행로를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획과 맞물려 스스로 자본주의의 광활한 지평으로 걸어들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향방에 대한 논의는 중국이 G2로 부상한 즈음에서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데이비드 하비는 아리기가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에서 부시정부의 프로젝트의 실패로서 미국이 헤게몬으로서의 지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자본주의와 영토주의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새로운 헤게몬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비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식' 특성을 갖지만, 신자유주의화와 계급권력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및 국민주의(nationalism)에 대한 호소, 그리고 어떤 제국주의적 긴장의 부활은 중국이 상당히 다른 방향에서부터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신보수주의적 물결과 합류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래를 위해 좋은 조짐은 아니"(David Havy/최병두, 2007; 185)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비는 중국의 새로운 헤게몬으로서의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신자유주의화한 중국의 새로운 헤게몬으로의 등장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란 권력의 대체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리기는 유럽과의 밀착에 의한 문제의 점진적 해결이 아닌 일방주의로 몰아붙이고자 했던 부시의 패착과 그로 인한 미국의 도저한 추락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경우도 세계시장과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거대한 무게감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보다는 무역과 경제적 교환에 역점을 두고 주변국과의 관계의 역사성을 형성해왔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차별되는 새로운 세계상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리기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키신저의 그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거나 대응하는데 실패했고, 이제 중국이 새로운 헤게몬으로 등장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의 역사성에서 보아 이제까지의 헤게몬과는 다른 형태, 바로 군사력이 덜 중요하고 무역관계 경제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중심지위로 자리매김될 것이라는 것이다.[6)]

3. 신형대국과 일대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실크로드 경제대(silk road economic belt, 이하 일대)" 구상을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해상실크로드(21th century maritime silk road, 이하 일로)" 구상을 또한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두 제안이 합쳐져 일대일로(一帶一路, The Belt and Road Initiative)로 지칭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로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함으로써 유라시아에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협력의 촉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21세기 대외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대는 "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발트해)",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페르시아만-유럽(지중해)", "중국-동남아 및 남아시아-인도양" 등을, 일로는 "중국 연해항구-남중국해-인도양-유럽"과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등을 주요 경로로 한다.[7)]

---

6) Giovanni Arrighi, Interview by David Harvey, *The Winding Paths of Capitalism*, New Left Review 56, March-April 2009

7) 신종호,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한반도에 대한 함의>, 『Online Series』CO 15-20(2015.8.12.)

이남주, <중국의 서진전략과 일대일로;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 《황해문화》, 2015 가을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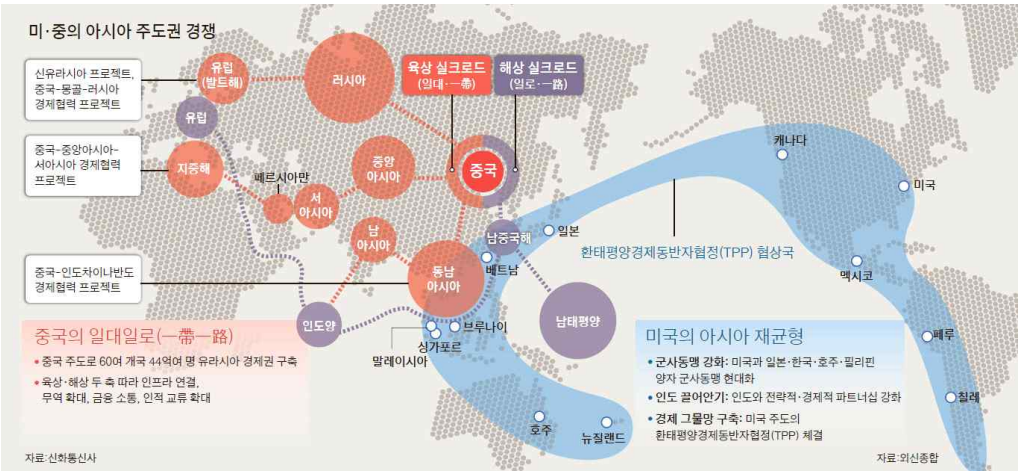
이남주는 일대일로가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라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이다.

둘째, 막대한 외환보유고 등 중국이 대대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도 성숙되었다. 유럽, 한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휴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재원은 더 증가한다.

셋째,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성공적 출범하면서 일대일로를 위한 추진동력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만약 일대일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라시아대륙이 다시 세계의 중심무대가 되는 변화가 출현할 수 있다. 일대일로는 관련 국가가 26개이고, 이들의 인구는 약 44억 , GDP 총량은 약 21조 달러로 각각 세계의 63%와 29%를 점한다고 설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7475160 2015.3.31.)

한편 대만의 쉬진위교수는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의 지정학적 경제전략의 측면에서 중국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설명하였다.[8)]

2014년 시 진핑(習近平)은 "뉴 노멀"을 공식적으로 가져와 현재 중국의 경제둔화를 설명했다. 중국의 설명 방식에 따르면, '뉴 노멀'의 방점은 일종의 새로운 평형 상태에 다시 도달하는 데 있다. 중국의 경제는 다양화될 수 있고(제조업으로의 집중, 특히 노동밀집형 혹은 자원밀집형 산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수준(고오염, 고에너지 소모형 경제성장 모델만은 아니다)을 회복하여 이익을 평균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1978년에서 2011년 장장 33년 동안 GDP 성장률은 거의 매년 10퍼센트 이상이었다. 이제 과거 30년간 택한 노동 및 환경 조건의 희생에 기반한 고속 산업화 모델에서 벗어나, 2008년 경제위기 후에는 위기조정발전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의 지역간 균형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에서도 균형을 찾아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자본과 기업의 '대외 진출'을 통해 국제적으로 투자기회를 찾고 나아가 이를 기회로 국내 수요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 의심할 것 없이, 대내적으로 일대일로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중요한 목표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착목하는 바이다. 또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말한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공간 메우기'의 전략이기도 하다. 그외에도 중국 입장에서 일대일로는 자원의 확보(특히 석유 및 광산 자원 합작) 및 전략적 종심(縱深) 개척(연해지역의 공업화 확장 및 서부내륙으로의 이동을 통해 전략적 배치를 조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한편 일대일로의 중요한 국제전략적 목표 또한 제기하는데, '실체나 기제가 아닌 경제협력의 이념 제창'이 그것이다.

---

8) 쉬진위(徐進鈺), <중국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경제학; 포용적 지구화인가, 예외공간의 창출인가?>, 《동아시아 잡지회의 자료집》, 2016.6.20

중국과 관련 국가들 간에 이미 존재하는 다자 기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협력 플랫폼의 도움을 빌겠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측 말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대륙을 관통하고자 한다. 한편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아시아경제권, 다른 한편은 발달한 유럽경제권이다. 그 중간의 광대한 내륙이 국가경제 발전에 미치는 잠재력은 거대하다. 실크로드경제벨트의 핵심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트해)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서아시아를 거쳐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로, 그리고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으로 통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핵심 방향은 중국 연해 항구에서 남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유럽으로, 그리고 중국 연해 항구를 지나 남해를 거쳐 남태평양으로 뻗어간다. 육상으로는 국제적 주요 통로(major path)에 의거, 연선(沿線, 철로-항로가 이어지는 것)중심도시를 지지점으로 삼고, 중점경제산업단지를 협력의 플랫폼으로 삼아, 신 유라시아 대륙, 중-몽-러,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반도 등 국제경제협력 통로를 구축한다. 또한, 해상으로는 중점항구를 고리로 삼아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거대한 수송로를 공동으로 건설하려는 것이다.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두개의 경제벨트와 '일대일로'의 추진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진일보한 협력을 통해 더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이 유라시아대륙의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과 충돌하는 형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

중국 입장에서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를 추진하는 미국 주도의 시도를 희석시킬 뿐 아니라 일대일로 무역을 통해 전지구 무역의 새로운 규칙 제정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 이를테면,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국내외 항구를 기점으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룰을 지닌 자유협정 담판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서 이런 실험이 일단 성공한다면, 상하이(닝보, 저우산을 포함)와 취안저우 메이저우(湄洲, 푸젠성福建省 푸톈시莆田市에 속한 섬) 만항(湾港)의 초대형급 심해항을 근거지로 국제적 중계접속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국제경제, 금융, 무역, 해운의 중심을 틀어쥠으로써 국제무역의 주도권, 가격결정권, 자원배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동적으로 가속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쉬진위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65개의 핵심 국가를 포괄하며, 그 포괄 면적은 5539제곱킬로미터로, 전지구 총면적의 약 41.3%에 해당한다. 그 혜택을 입게 될 인구는 46.7억명으로, 전지구 총인구수의 66.9%이다. 해당 지역 경제총량은 27.4조 달러로서, 이는 전지구 경제총량의 38.2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이 포괄되어 인프라 건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러한 서진전략은 물론 신상태를 이루고 있는 중국 내수경제의 과잉생산력 해소라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점에서 내수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 신경제모델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자본의 위기적 재편의 문제는 유라시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 중국몽과 문화중국의 미래

리오리엔트(Reorient), 다시 중국으로 아시아로 세계사의 전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신실크로드기획으로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경제협력네트워크를 문명사의 새로운 궤적화를 추진해가고자 하는 지점에서 여실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작년 10월 중국공산당(제18기 5중전회)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13.5) 기획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라는 개념으로 중국경제의 새로운 전환기획을 심의·통과시켰을 때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도 확인된 바이지만 중국경제가 이전과 같은 활력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추동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리커창(李克强)총리가 <정부공작보고>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바오치(保七·7%대 경제 성장률 유지) 고속 성장이 아니라 향후 5년간 6.5-7%의 중고속 성장률을 유지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주된 추진내용은 시진핑 주석이 공급 측면의 개혁을 최대 정책기조로 내세운 바와 같이 중국은 철강과 석탄 등의 과잉생산 해소와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에 돌입하

고 있고, ‘친(親)’, ‘청(淸)’ 두 글자로 정부와 기업의 공존방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의 아시아 경제협력망을 광역적으로 추동하는 가운데 유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13.5'규획에 편입시키고 G20 회원국과 나라별 의제 제정 및 G20 전체 행동계획 마련 등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 성장촉진을 도모해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전환은 중국이 자본의 유연축적체제에 세계 어느 국가·지역보다 기민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이 기획한 경제협력네트워크가 ‘다른 지역을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나 자원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자기모순의 타개책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관건은 개혁개방 30년을 이끈 베이징 컨센서스(국가주도 경제발전모델)의 계승적 극복으로서 새로운 중국형 경제민주발전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있다.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에 대한 개혁을 경제 성장면에서는 이루어냈지만, 정치 개혁면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정치의 경로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따라서 국가-당의 일원화구조 속에서 대다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대표성정치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현실”(왕후이, 2011)에서 대표성 정치의 탈구지점들 - ‘탈정치화’, ‘대표성의 단절’, ‘밀실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중국식 정치민주화의 경로를 열어갈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의 지점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이끄는 ‘팍스 시니카’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에는 시진핑의 “중국몽(China Dream)”은 마오이즘의 사상적 위상와는 비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지도사상의 부재문제를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사상으로서 사회주의의 현존문제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한편 문화대국 중국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국가 비전으로, 하여 문화산업을 국민경제 지주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수립, 지역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실제적인 ‘문화클러스터’ 건설 등으로 구체화해간다는 점 또한 문제적이다.

후진타오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목표였던 ‘화해사회 건설’은 개혁개방으로 파생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통해 모든 계급·계층의 이익이 ‘화해’를 이루는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불균형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 구체화되고 그로서 ‘화해’ 경제의 지역모델들이 선택과 집중의 장면들로 펼쳐진 바 있는 것이다. 권기영은 이를 마르크스와 공자의 화해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문화와 문화산업으로 포착하고, 그 실상을 소상하게 지형화하여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또하나의 장소가 문화안보, 문화외교, 국제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계와 국제경제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중국특색의 ‘문화중국’의 경로로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공자학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되듯이 ‘문화중국’의 화해경로는 아직 완정하게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21세기 문화중국으로서 세계문명의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기에는 중국의 문화강국 기획은 국가 차원이나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문화시장에서 대중의 소비욕망과 경합하며, 탈경계적으로 재구성되어 가고 있기는 지점을 다시 살피게 한다.